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 / 8 / 17 통권 1584호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왜 품질한국인가?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8월 말까지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 부부간 선증여재산의 상속시 합산관계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화재나 수재등으로 사업용 자산에 손실이 발생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8월 말까지
- 8월은 주민세 신고의 달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어려운 법인세 공제 · 감면, 국세청에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 민생경제 지원 및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한 경 제위기 극복 뒷받침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동업기업의 비상업용 토지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금액은 동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배분 반영함 (p.12)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 戰略

<부가세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사업자간 비교>

개념 구분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개인)
사업자 개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간편한 절차로 부가세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
재화·용역 총가액	재화 · 용역가액 + 10% 부가세 별도가산	재화 · 용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포함가액임
세금계산서	발행함 : 공급가×10% 추가	발행함 · 부가세 10% 별도기재
적용업종	제조 · 광업 ·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사업자 등 8천만원 이상	소규모 사업자(전년도 매출 8천만원 미달사업자 등)
부동산임대업	전년도 공급가액 4800만원 이상	전년도 공급자 4800만원 미만
과세유흥장소	전년도 공급가액 4800만원 이상	전년도 공급자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방법	매출액×10% - 매입액×10% = (매출-매입)×10%	매출액×10%×부가가치율 - 매입액 ×0.5% (부가가치율 = 소매 · 음식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기타 30%, 전문직 · 임대업 40%)
신고납부기간	매 6개월 단위 (법인은 3개월 단위)	1년 단위(1.1 ~ 12.31)로 매년 1월 25일 신 고 · 납부함
상대방 매입자	매입부가세액(10%) 전액공제	매입부가세액 전액 공제함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84호 / 주간 33호

2022. 8. 17. (수)

· 발 행 인 : 이 윤 연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예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부가세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사업자간 비교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부부간 선증여재산의 상속시 합산관계	2
C E O 에 세 이	왜 품질한국인가?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무상 수출 건 부가세 신고 문의 - 법인가 공동사업 관련 - 지방세 특별징수분 근무지역별 납부 문의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화재나 수재등으로 사업용 자산에 손실이 발생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7
매 일 절 세 제 무 요 점	- 지방이전 세제 개정안 -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주요내용	9 10
직 장 인 Survival	멘탈 갑의 비법 13가지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국외에서 근무하던 자가 퇴직 후 국내에서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금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규소득-1087, 2022.01.20) - 사업자가 복합건축물을 건축하여 복합문화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시설은 교육청에 기부함에 있어 복합건축물 건축에 소요되는 일부 사업비를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지급받은 정점사업비 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1207, 2021.12.30)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가상자산 불법상속·증여 15년 지나도 세금 부과...50억 넘을 때만	14
마케팅 Tax consulting	동업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금액은 동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배분 반영함	12
세 무 정 보	-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8월 말까지 - 8월은 주민세 신고의 달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어려운 법인세 공제 감면, 국제청에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 민생경제 지원 및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뒷받 침	15 27 31 34 39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 준·재정환율	26

부부간 선증여재산의 상속시 합산관계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개념, 구분	증여, 반환증여 및 예금증여, 부동산 증여의 관련 세금 등
부부간 증여공제	특정증여 이전 10년 범위에서 합계 후 6억원 공제
증여 후 반환	증여 후 3개월 내 반환 : 증여세 없음(당초증여, 반환증여)
	증여 후 6개월 내 반환 : 당초 증여는 증여세 과세, 반환증여는 면제
	증여 후 6개월 초과반환 : 당초 증여세 과세, 반환증여도 과세
부부간 재산 소유	부부간 균등, 균형 재산소유시 상속세 부담 최소화됨
상속공제 활용	상속시 가족 등 기본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30억원 최대)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소유재산을 10억원 내외로 소유토록 분산함(타방배우자 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유한 부부	60대 이후는 10년 단위로 소유재산 일부를 자녀에게 분할증여 : 상속세 절감
1세대 1주택	전세보증금 있는 상태에서 자녀에 증여(증여세 절감) + 부담부증여 금액의 양도세 비과세
전세보증금	부모가 받은 전세보증금 10억원 내외 상속이면, 상속공제 10억(= 기초 5억 + 배우자 5억)으로 공제상쇄되어 상속세는 없음

왜 품질한국인가?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직업상 중국을 자주 왕래했다. 당연히 땅이 넓다보니 자동차를 타고 몇 시간씩 왔다갔다하는데 그 일이 보통 고역이 아니다. 멀쩡하게 생긴 중국산 폭스바겐(Volks Wagen)독일 브랜드의 자동차가 흔해서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폭스바겐이 본토 독일산 폭스바겐과는 판판이다.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오래전 한국의 새나라 택시꼴이다. 그래서 그걸 타고 몇시간 왔다갔다 하다보면 녹초가 된다. 같은 브랜드 폭스바겐인데 왜 독일 본토산과 중국산은 그렇게 다를까?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동차 회사들이 장기적 안목으로 중국에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독일 본토보다 더 새 설비로 공장을 차려 생산하는 자동차라는 설명을 들으면 더욱 아리송해진다.

중국산 폭스바겐은 왜 덜덜거리나

첫째, 자동차 산업은 전자, 기계와 화학 등 모든 산업의 총화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부품이 결합되는데 그 부품산업의 ‘품질’이 본토 독일과 같을 수 없다. 그러니 조립공장의 설비가 제아무리 훌륭하다해도 독일산과 같은 수준이 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아무리 기술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기계와 결이 삭아 한 몸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독일에서 구형 설비를 사용하지만 사람의 감각과 손에 익은 망치질이 더욱 정교하고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적합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것은 비단 자동차 산업만이 아닐 것이다. 가령 장충동에 유명한 ‘원조 돼지 족발집’의 음식도 그렇고 예술의 전당 앞에 유명한 강원도 할머니 손맛의 ‘순두부집’ 음식도 그렇다. 요리책을 보며 유난을 떨어대지만 어머니의 뚝배기 된장찌개 맛보다 못한 초보 주부의 찌개 맛도 비슷한 사례인 듯하다.

어머니 독배기 된장찌개 맛 같은 품질

여하간에 품질이란 단순한 게 아닌 것 같다. 규격검사, 불량품질검사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단순한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야겠다. 품질은 본질적으로 기술을 실천하는 'Q(Quality)'라 할 수 있으므로 기술을 완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현장의 실천과정에서 피드백(feed back)되면서 기술을 돕구는 'Q'다. 그래서 품질과 기술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생(Win-win)적 관계다. 따라서 품질은 21세기 미래 한국의 생존 전략적 키워드(Key word)다. 그리고 지향점이다. 기술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대규모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기술도 품질과 결합되어야 아웃풋(output)을 생산할 수 있다. 요컨대 '기술은 연구소, 품질은 현장'이기 때문이다.

세계 정상의 경쟁력, 슈퍼파워(Super Power)인 미국의 뉴테크(New-Tech)인 IT, BT, NT등도 품질과 결합함으로써 1990년대에 일본을 능가할 수 있었다. 품질은 기업의 생산현장의 뭉이라 고만 보았던 미국이 1987년 국가품질법(National Quality Act)을 제정하였고 국가품질상 재단을 설립하였다. 그것을 계기로 국가품질상인 말콤 볼드리지상을 백악관 차원에서 아우르면서 이루어진 쾌거라 할 수 있다.

기술은 씨앗, 품질은 밭

1992년 EU역시 유럽품질상(EQA)을 제정하였다. 미국에서 꽃핀 품질운동이 EU까지 열광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품질'은 한국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패러다임의 대변혁이 될 수 있다. 이제 양적 성장을 지양할 때다. 아니 이미 지났다. 경제원론대로 양적 성장에서 출발했으나 질적 발전을 통한 가치창조가 긴요해졌다. 그것이 바로 품질이다. 크게 눈을 부릅뜨고 과감하게 생존전략의 트렌드(Trend)를 새롭게 파악하고 실천에 옮길 때다. 품질은 테크놀로지(Technologies)와 결합하여 고객만족, 국민만족을 이루어내는 실천적 프로그램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긴요하다.

국가경쟁력의 중심축은 아무래도 기업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 기업은 사회 속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질은 정부와 국민의 질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상승적 관계를 이루면서 국가의 미래를 열어간다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품질은 알파요 오메가다. 포용범위도 국가적이다. 그래서 품질 한국이다.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Q 외국인 연말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9년 9월에 퇴사한 외국인 직원으로 2020년 7월에 추가 소득이 발생하여 직원에게 지급한 후 본인에게 지급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지급액 대하여 해당 귀속분의 원천세 신고 및 소득세 납부도 정상 완료 하였습니다.
이 외국인 직원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시기에 근무한 직장에 이 추가 소득에 대하여 전달하지 않았고, 이 회사도 외국인 연말정산인 경우에는 내국인 연말정산과 달리 외국인 연말정산은 본인 비용이 아닌 회사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회사도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 외에 종전 회사의 추가 소득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 하지 않고 종전 회사의 소득을 누락하여 연말정산을 신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추가 소득을 2020년 연말 정산때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가산금 통지 납부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퇴사한 외국인 직원 및 당시 외국인이 근무한 회사는 추가 소득에 대한 가산금을 저희가 소득 원천지이므로 가산금의 반을 부담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말 정산때 누락한 소득에 대하여 저희가 가산금의 반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A 연말정산오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게 책임이 있으나, 직원이 자료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라면 직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귀사가 퇴직자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라면 귀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산금에 대한 귀책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상 수출 건 부가세 신고 문의

Q 캐나다에서 중국으로 발주가 나고 invoice 와 지급도 캐나다와 중국 간에 거래 하는 것을 당사가 중간에서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물건을 받아서 수입 신고를 하였고, 무상으로 수출 신고하여 핸드 캐리 하였습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출 실적 명세서 및 매출 과세 표준에 반영 하여 수입 금액 제외로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A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실적명세서 등에 영세율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법인세 신고시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간 공동사업 관련

Q

다음의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1. 법인간 공동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건가요?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면 대표자의 명의로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2. 법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A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이므로, 법인간 공동사업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는 사업의 주체가 2이상의 법인이므로 당연히 법인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방세 특별징수분 근무지역별 납부 문의

Q

현재 사업장이 임차한 건물에서 근로자 1명이 근무중입니다.

해당의 경우 국세는 본점에서 납부하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본점 관할 구청에 납부를 하면 되는건지,

실제 근무하는 지역(임차한건물)의 관할 구청에 납부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이므로 특별징수의무자의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면 됩니다.

화재나 수재등으로 사업용 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연간 1,000~1,500mm 정도의 비가 내리며, 이중 50~60% 정도가 여름철에 집중된다고 한다.

이렇듯 1년 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시즌이다 보니 여름철이 다른 계절보다 비에 의한 재산적·물질적 피해가 빈번하며 그 피해금액도 큰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수재나 혹은 기타의 재해로 인해 기업들이 재산적 손실을 입어 납세가 곤란하게 된 경우 일정정도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요건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이유와 재해의 범위

재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재·수재·지진·화산·폭발·냉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방화·화재·실화·붕괴·교통사고·인위적 폭발 등의 산업재해와 인재 등도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기업의 정상적 운영과정에서도 화재나 수재와 같은 자연재해 또는 기타의 산업재해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고가의 첨단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실도 막대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다수의 회사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재해로 인한 손실을 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설사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회사가 입는 유·무형의 재산적 타격은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 이렇게 재해로 인한 재산적·물질적 손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재해손실세액공제가 바로 그것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요건

자연재해나 산업재해 등에 의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만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재해가 아닌 임의사유(즉, 노사쟁의 파괴 등)로 인해 20% 이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재해로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의 규모가 총자산의 20% 미만이라면 역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손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자산이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과 타인소유 자산 중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기업에게 있는 자산을 말하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재산 상실비율은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재산가액이 상실되기 전의 총 자산(토지가액은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상실된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자산의 가액과 상실후의 가액은 모두 법인의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세무서결정일의 현재가액으로 계산하게 된다.

재해손실공제의 내용

재해로 인해 총자산의 20% 이상의 손실을 받은 기업은 재해 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율을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해로 인해 총자산의 35%를 상실한 경우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35%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세액을 의미한다(개인사업자의 재해손실공제대상이 되는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임).

여기서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경과하였으나 법인이 무신고 하거나 과소신고하여 향후 정부의 결정이나 경정에 의해 추가로 발생될 법인세와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세를 뜻한다.

또한 미납된 세액이란 정부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고지된 법인세 중 미납된 세액과 법인의 자진신고절차에 따른 법인세 신고금액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말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신청

재해로 인한 손실을 입은 기업이 재해손실공제를 받으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미납된 세액은 1월내에, 과세표준 신고기한 미경과법인세는 신고기한내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고기한이 1월 미만이면 1월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지방이전 세제 개정안

구분	해당 지역	감면기간		구분	해당 지역	감면기간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지방의 광역시, 중규모도시 등	5+2년	⇒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지방의 광역시, 중규모도시 등	5+2년
				2	지방광역시·중규모 도시 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기타 지역	7+3년
2	기타 지역	7+3년		3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 단, 수도권·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 등은 제외	10+2년



복수 금전 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가정)

날짜	대여금액(원)	약정이자율	증여재산가액(원)	증여세 발생 여부
2021년 9월 1일	1억5000만	1.0%	540만 = 1억5000만 × (4.6% - 1.0%)	×
2022년 1월 5일	1억3000만	1.7%	917만 = 540만 + [1억3000만 × (4.6% - 1.7%)]	×
2022년 5월 25일	3억	3.0%	1397만 = 917만 + [3억 × (4.6% - 3.0%)]	○ (139만7000원)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주요내용

주제	내용	시행시기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1년간 한시 배제	2022년 5월 10일부터 소급적용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	2022년 6월 21일부터 적용
종부세 부담 완화	고령자 · 장기보유자 납부유예	20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 적용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저가 주택 주택수 제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율 10~12% → 12~15% 상향	2022년 월세액 적용
전월세보증금 소득공제 확대	공제한도 연 300만원 → 400만원 확대	2022년 전월세 상한액 적용



월세액 대비 실제 세액공제 환급 예상액

월세액	연간 월세총액	환급 예상액					
		총급여 5500만원 ↓		추가 환급액	총급여 5500만~7000 만원		추가 환급액
		개정 전 (12%)	개정 후 (15%)		개정 전 (10%)	개정 후 (12%)	
30만	360만	43만2000	54만	10만8000	36만	43만2000	7만2000
35만	420만	50만4000	63만	12만6000	42만	50만4000	8만4000
40만	480만	57만6000	72만	14만4000	48만	57만6000	9만6000
45만	540만	64만8000	81만	16만2000	54만	64만8000	10만8000
50만	600만	72만	90만	18만	60만	72만	12만
55만	660만	79만2000	99만	19만8000	66만	79만2000	13만2000
60만	720만	86만4000	108만	21만6000	72만	86만4000	14만4000
62만5000	750만	90만	112만5000	22만5000	75만	90만	15만



멘탈갑의 비법 13가지

01. 탓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 멘탈 갑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유감스러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법을 탓하며 빈둥거리지 않는다.
02. 자신의 독립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 그들은 "직장상사 때문에 기분나빠 죽겠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알며 어떤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선택하는 것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03. 변화를 피하지 않는다 - 멘탈 갑은 변화를 환영하며 어떤 변화가 닥치든 유연하게 대처하려 한다. 그들은 변화란 불가피하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다.
04. 어쩔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 멘탈 갑은 교통체증이나 공항에서 잃어버린 수하물 때문에 열 받지 않는다.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나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05.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 멘탈 갑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필요할 때 '절대 안돼'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06. 계산된 리스크라면 떠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 멘탈 갑은 리스크를 떠안았을 때 최대 어떤 손해를 입어야 하는지 철저히 평가한 뒤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행동에 나선다.
07.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 멘탈 갑은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과거로부터 배웠다고 말하며 현재와 미래에 집중한다.
08.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 멘탈 갑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진다. 따라서 과거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09.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는다 - 멘탈 갑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잘됐을 때 분개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 자신의 성공에만 집중할 뿐이다.
10. 한두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는다 - 멘탈 갑은 실패했다고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패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11.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멘탈 갑은 외로움과 고요함을 견딜 수 있다. 그들은 혼자 서도 재미있고 행복하다.
12. 세상이 자신에게 빚진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 멘탈 갑은 세상이, 혹은 인생이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역량과 장점을 토대로 기회를 노릴 뿐이다.
13.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 멘탈 갑은 건강이나 사업이나 일에서 성과가 빨리 나오지 않아도 초조해 하지 않는다.

최 신 판 례 예 규

**국외에서 근무하던 자가 퇴직 후 국내에서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연금
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규소득-1087, 2022.01.20

■ 질 의

- 질의인은 독일에서 국제연합(United Nations) 산하 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국내 거주자의 지위에서 연금 명목의 금원(이하 "쟁점금원")을 '22년부터 수령할 예정임

질의

- 국제연합으로부터 매달 지급받는 연금의 과세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외에서 국제연합 산하 기관에 근무하던 자가 퇴직 후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제1호 거주자의 지위에서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신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부수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법령부가-735, 2021.12.29

■ 질 의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지원,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위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으로
- 해운항만사업자의 자산취득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

급보증을 하고 보증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질의

-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항만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금융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회 신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가 해운항만사업자의 자금 차입에 대한 채무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동업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금액은 동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배분 반영함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 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동업자 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함

서면법규법인-4605, 2022.01.20

■ 질 의

- 동업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동업자(거주자, 내국법인)에게 배분하는 방법 및 관련 세액의 동업자별 납부 방법
- *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및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Ⅰ 회 신

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갑법인, 갑법인의 동업자는 내국법인 A와 거주자 B로 구성)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내국법인인 동업자 A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내국법인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A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하고, A는 해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갑법인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법인세법」 제55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A의 손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A에게 배분하고, A는 해당 금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2. 위 갑법인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거주자인 동업자 B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B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하고, B는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복합건축물을 건축하여 복합문화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시설은 교육청에 기부함에 있어 복합건축물 건축에 소요되는 일부 사업비를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지급받은 쟁점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1207, 2021.12.30

Ⅰ 질 의

- (질의1) 사업자가 복합건축물을 건축하여 기부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쟁점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2) 건설업자가 사업자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교육청이 실제 부담하는 쟁점사업비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Ⅰ 회 신

사업자(이하 "A법인")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교육청과 '복합문화도서관(이하 "복합건축물") 건립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는 복합건축물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건물 공사비 중 일부(이하 "쟁점사업비")를 부담하며, 잔여 사업비는 A법인이 부담하여 복합건축물을 준공한 후 복합문화시설은 지자체에, 도서관 시설은 교육청에 기부하는 경우 쟁점사업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복합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A법인과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A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건설업자가 A법인과 교육청에 각각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가상자산 불법상속·증여 15년 지나도 세금 부과...50억 넘을 때만

고액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단, 5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에서 50억원 초과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납세의무가 생긴 시점부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넘으면 과세당국은 세금을 매길 수 없게 된다.

일반 세금은 5년까지지만, 상속·증여세는 10년, 탈세의 도를 갖고 미신고·허위 신고한 경우는 15년이다.

부과제척기간 특례란 부과제척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당국이 인지한 시점부터 1년 이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세당국이 인지하기 어려운 매우 특별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현재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는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도 포함하겠다는 의도다.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는 과세당국이 자료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025년부터로 미뤄졌지만, 가상자산 상속·증여는 현재도 과세대상이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사람은 국내 4대 거래소의 해당 자산 두 달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4대 거래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공시 시세 가액 등 합리적 인정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한다.

유류세 50%·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국무회의서 공포안 의결

정부가 9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상향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별 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소득세 법률공포안 등 안전 19건을 의결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다 상향은 공포된 날로부터 내년 말까지 시행되며, 적용대상은 등유, 석유가스, 휘발유, 경유 등이 적용된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추석 물가 적신호에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확대 검토

치솟는 추석 물가에 서민 고충 가중을 우려한 정부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일부 농산물에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특별자금 대출·보증 공급에도 나설 방침이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특히 명절 성수품 가격 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될 전망이다. 7월 채소류 등이 급등해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7.1%로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까닭이다.

정부는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사과, 배, 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명태, 오징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추석 성수품으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이다. 명절 성수품 이외에도 가격이 급등한 품목들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성수품과 특별관리품목 중 농산물 일부에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 것처럼 가격이 크게 오른 농산물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대파, 사료용 보리·귀리·옥수수, 기름용 대두, 침엽감자 등에는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 중이다. 여기에 가격 상승세와 국내의 작황을 고려해 추석 성수품이나 특별관리품목으로 분류된 일부 농산물이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저장성이 부족해 수입이 어려운 배추와 무 등 할당관세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8월 말까지

- 국세청, 2022. 8

- (개요)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8월 31일(수)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내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
- (신고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월 2일(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수 회전자, 수신거부 등)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실 수 있으며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세정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1

'22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8월 31일까지입니다.

- (신고의무)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8월 31일(수)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 '21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을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 '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 (안내대상)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를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신고안내문 발송 일정 |

8. 2.	8. 3.	8. 8.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종이 안내문*

* 다수 회선자나 모바일 안내 거부자,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발송

2

편리한 전자신고서비스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 (홈택스등 이용 간소화) 다양한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도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에서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등), 지문인식·얼굴인식(아이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 (신고도움자료 제공) 납세자가 더욱 쉽고 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홈택스·손택스에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식 양도신고도우미) 게시된 신고서 작성 사례, 전자신고 가이드 등을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거래내역 제공)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5개년)을 증권사로부터 수집하여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번호 조회서비스) 신고서 항목 중 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상장법인 사업자번호를 종목명(종목코드)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3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사업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연장기한)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손택스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4 성실신고 납세가 최선의 절세방법입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1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개요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 (국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코스피(1%·10억 원 이상), 코스닥(2%·10억 원 이상), 코넥스(4%·10억 원 이상)
소득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20. 1. 1. 이후 양도분)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양도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 원 * 국내·국외주식 통산은 확정신고 기간에 하여야 함



세 율	· 국내주식: 10% ~ 30%	
	중소기업	구분
		세율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대주주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신고납부	· 국외주식: 20% (중소기업 주식은 10%)	
	· 국내주식: 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 · 국외주식: 확정 신고·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참고 2 -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2년 상반기(1월~6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구 분	신고기한	(예)양도일 '22. 3. 16.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신고기한: '22. 8. 31.
특정주식·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신고기한: '22. 5. 31.
국외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예정신고 제외)	신고기한: '23. 5. 31.

2.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을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 (최대주주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20.4.1. 이후~ 현재)

구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공통)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함.

3.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한국장외시장 외)를 한 주주의 경우 신고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자료수집 시점 차이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과세제외되는 한국장외시장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 한국장외시장(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합니다.

5.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의 양도손익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예정신고 시 국내 주식 간 양도손익과 확정신고 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통산이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6.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7.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외주식을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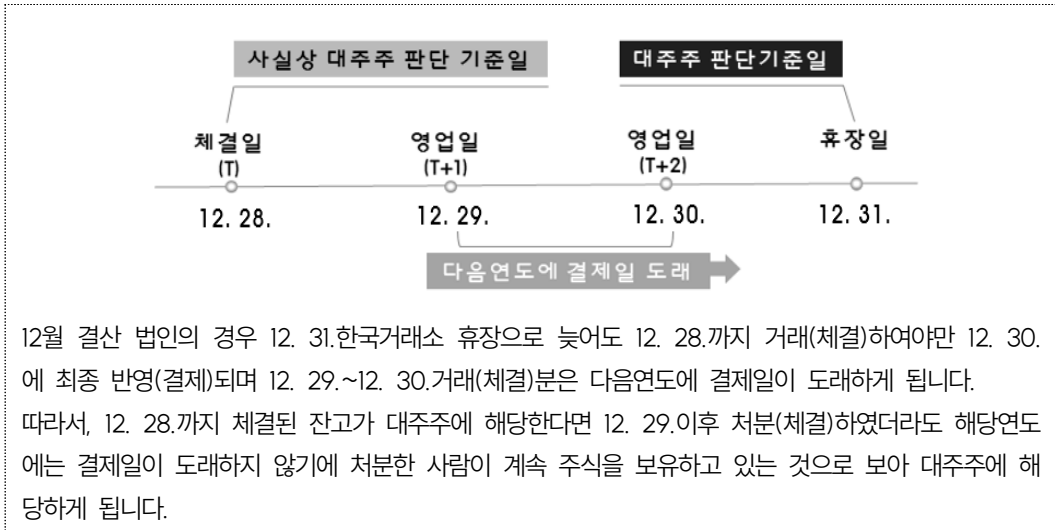
-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3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9.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 202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11.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예정신고 대상 기간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홈택스를 통하여(본인인증 후 접속)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주식 등 거래내역)
 - ☞ 예정신고 대상기간을 포함 및 직전 5개년 거래내역 조회 가능
 - 다만, 증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래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에 자료 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함
- 또한, 본인 이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거래내역은 개별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13.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 신고는 매일 06:00~24:00, 납부는 07:00~23:30까지 가능함
 - 다만, 금융거래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세금 납부 가능



14.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참고 3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 접근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접속 후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예정신고 작성' 선택 ○ 이용 시간: 매일 06:00 ~ 24:00(~8. 31.)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 (홈택스)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우편신고 · 방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기한: '22. 8. 31.(수) 18:00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②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p>*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p> <p>◦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p>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p>◦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or.kr)</p> <p>◦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p> <p>◦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p> <p>◦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p> <p>* 인터넷지로 정기점검 시간 등에는 납부 불가</p>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p>◦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p> <p>◦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p> <p>*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p> <p>◦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p> <p>◦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p> <p>◦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p> <p>* 금융기관에서 설치한 공과금 납부 전용 단말기</p>
세무서 (무인카드 수납기)	<p>◦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p> <p>*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p>

참고 4 -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내용

1. 주식 양도소득세 세법TIP

☐ (세법정보) 양도소득세 과세개요 및 대주주의 범위, 취득·양도 시기 등의 정

2. 신고서 작성사례

☐ (작성사례) 실제 사례를 통한 신고서 작성요령을 안내

3. 자기검증용 검토서

☐ (자기검증) 대주주 요건, 중소기업 요건 검토 및 양도세율 적용 검토 서식을 점검표로 제공



4. 자주 묻는 질문

- ☐ (질문제공)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답변과 함께 제공

5. 신고오류사례

- ☐ (오류사례) 반복해서 발견되는 오류 및 무신고 사례를 제공

6. 전자신고가이드

- ☐ (전자신고) 홈택스·손택스상의 신고 흐름을 안내

참고 5 - 사업자번호 자동조회·채움 서비스

- 상장주식 종목명 또는 주권종목코드로 발행법인의 사업자번호를 조회하여 신고서 입력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
 - ①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필수입력항목) 입력
 - ②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상장법인의 사업자번호를 모르는 경우
[주권종목코드 조회] 메뉴 선택 > 종목코드 또는 종목명 입력 조회하기 > 목록에서 더블 클릭으로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참고 6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구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0.6.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 ○ 소득세법 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주 : 20~25%, 일반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 30% ☞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세율 적용 (중소기업 : '20.1.1.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1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상장 여부 불문)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p>6%~45%의 누진세율*을 적용 대상이나 일반 주식세율(10%, 20%, 25%, 30%)을 적용하여 신고</p> <p>*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에 10%p 더한 세율 적용</p> <p>◦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 30%를 적용하여야 하나 20~25% 세율로 신고</p>
대주주 세율	<p>◦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1년 이상 보유주식)</p> <p>* '22년 상반기 예정신고 시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5억 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22년 하반기 예정신고 시 비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p> <p>◦ '20.1.1.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 해당 법인과 중소기업이 아닌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1년이상 보유)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0~25%)을 적용하여야 하나, 합산하지 않고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p> <p>*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p>
대주주 판단	<p>◦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양도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대주주를 판단하여야 함</p> <p>◦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과소신고</p> <p>*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A사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봄</p> <p>◦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잘못 판단</p> <p>*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p>
국내외 주식 통산	<p>◦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등은 제외)을 '22년 상반기에 양도,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국외주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잘못 신고</p> <p>* '20.1.1. 이후 국내·국외주식간 손익통산 가능하나,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외 주식 양도차손을 예정신고로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p> <p>◦ '22년에 국내주식을 양도 후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공제하고,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 양도 후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p>



구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p>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공제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p> <p>* '20년부터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만 공제 가능</p>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대상이나 장내거래만 신고한 경우 ◦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 통산이 가능하나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주식과 상장법인 대주주가 거래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손익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야 하나,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8월 5일(금)	8월 8일(월)	8월 9일(화)	8월 10일(수)
미 달 러 (USD)	1309.70	1299.30	1304.80	1305.10
일 본 엔 (JPY)	986.22	961.91	967.06	965.77
영 국 파 운 드 (GBP)	1592.99	1567.22	1576.72	1575.84
캐 나 다 달 러 (CAD)	1017.95	1003.98	1014.70	1012.73
홍 콩 달 러 (HKD)	166.85	165.52	166.22	166.26
위 안 화 (CNH)	193.83	192.20	192.73	193.09
유 로 화 (EUR)	1342.44	1322.04	1330.50	1332.31
호 주 달 러 (AUD)	912.60	897.36	911.47	908.15
싱 가 폴 달 러 (SGD)	951.78	940.36	946.57	946.38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93.79	291.58	292.62	292.95

8월은 주민세 신고의 달입니다

- 행정안전부, 2022. 8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된다.
 -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외국인
-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구 균등분)과 연면적세율**(구 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 * 개인사업자(5만원), 법인사업자(자본금액 등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적용)
 - ** 사업소 연면적 330m2(100평) 초과하는 경우 제곱미터당 250원 과세
- 한편,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되어 위택스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들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기간 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 *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재산분과 통합되면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었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



- 올해에는 제도 개편에 따른 계도기간임을 고려하여 기본세율분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은 정상 부과(연체이자 성격)
- 납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주민세 뿐 아니라 모든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 주민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자원” 이라면서 “앞으로도 납세 행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참고 1 - 주민세 개요

- 주민세 체계
 - (과세체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

세목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범위 내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기본세율) 5만원~20만원 + (연면적) 250원/㎡
종업원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월지급급여액의 0.5%

- (세수 귀속)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
 - ※ 광역시의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
- 주민세 개인분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납세의무 제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청년이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에 준하는 자'에 포함됨
 - (납세지)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 (세율)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세액(제한세

을)

- (징수방법)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 징수
- (납기)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주민세 사업소분

- (사업소)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납세의무자) ①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②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납세지) 과세기준일(7.1.)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율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을 합산하여 세액 산출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50% 가감하여 탄력세율 적용 가능

기본세율			연면적에 대한 세율	
	개인	5만원		
법인	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이하	5만원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25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
	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 50억원	10만원		
	자본금액·출자금액 50억원 초과	20만원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
	기타	5만원		

- (중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원/㎡ 적용
- (징수방법) 과세기준일(7.1.) 현재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납기)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21년~) 〉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되어 있던 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
- 7~8월에 걸쳐 있던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

세세목		납세의무자	세율
균 등 분 (8월)	개인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이하
	개인 사업자	사업소를 둔 개인	5만원
	법인	사업소를 둔 법인	5~50만원
재산분(7월)		사업소를 둔 사업주	250원/m ² (연면적)
종업원분(매월)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급여총액의 0.5%

세세목		납세의무자	세율
개인분 (8월)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이하
사업소분(8월)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기본세율) 5~20만원 + (연면적) 250원/m ²
종업원분(매월)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급여총액의 0.5%

참고 2 - 주민세 사업소분 위택스 신고·납부방법

- 신고하기 → 지방세 → 주민세(사업소분) 선택 → 신고
- 사업소분 신고 전체 화면(납세자 인적사항, 신고내역 입력 후 세액계산)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및 법인 자본금액 선택 화면
 - 1) 국세청 연계 자료를 통한 과세표준 및 자본금 선택 방식(연번검색 → 팝업 화면 → 해당 건 선택)
 - 2) 납세의무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
 - 개인사업자(연번검색 → 팝업 화면 → 직접입력 신고 선택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액 구분 선택)
 - 법인사업자(연번검색 → 팝업 화면 → 직접입력 선택 → 법인사업자 자본금 구분 선택)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완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기획재정부, 2022. 8

-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종부세법 시행령)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미분양주택 등 세제지원 강화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령 §2의4)

- ❶ (현행)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시 금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적용
* ('18년 이전) 80% → ('19) 85% → ('20) 90% → ('21) 95%
- ❷ (개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
- ❸ (적용시기)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종부세령 §4①)

- ❶ (현행)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 사업계획승인 대상(30세대 이상 등)은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
 - 건축허가 대상(30세대 미만 등)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 ❷ (개정)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 부여
- ❸ (적용시기)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민간 건설임대 중부세 합산배제 혜택 확대] (중부세령 제31447호 부칙 §2)

- ❶ (현행)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1.2.17일 이후 임대 등록 분부터 중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공시가격 6억원 이하→9억원 이하)
- ❷ (개정) '21.2.17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요건 적용('22년 귀속 중부세분부터 적용)
 - * '21.2.17일 이전에 임대 등록을 하였어도 '21.2.17일 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이 완화된 요건 적용
- ❸ (적용시기) '22.11월 중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2 (소득세법 시행령)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소득령 §155의3)

- ❶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 (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 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 게도 혜택 적용
혜 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특 공제	없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 기한		'22.12.31일	'24.12.31일 (2년 연장)

- ❷ (개정)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보완을 위한 최우선 정책 추진과제로 제안 (부총리 주재 부동산전문가 간담회, 6.14.)
 - ☞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
- ❸ (적용시기) '21.12.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 건설 세제지원 강화

[민간 건설임대(법인사업자)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법인령 §92의2②)

- ❶ (현행) 주택가액(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20%) 배제
- ❷ (개정)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9억원 이하로 완화
- ❸ (적용시기) '22.8.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법인세 특례 연장] (법인령 §92의2④)

- ❶ (현행)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22.12.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20%) 배제
- ❷ (개정) 적용기한을 '24.12.31일까지 2년 연장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개소령 §2조의2)

○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22.8.1~12.31)

유 종		현행		개정 (탄력)	유 종		현행		개정 (탄력)
		기본	탄력				기본	탄력	
L N G	발전용 LNG (일반)	12	12	10.2	유 연 탄	고열량탄 (5,500kcal~)	46	49	41.6
	발전용 LNG (열병합)	12	8.4	8.4		중열량탄 (5,000~5,500 kcal)		46	39.1
	非발전용 LNG	60	42	42		저열량탄 (~5,000kcal)		43	36.5

어려운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에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 국세청, 2022. 8

-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버팀목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으나 세무신고 과정에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 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줍니다.
 - 또한,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1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개요

- (추진배경)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0년 7월부터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 * 수입금액 100억 원 ~ 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법인과 컨설팅 협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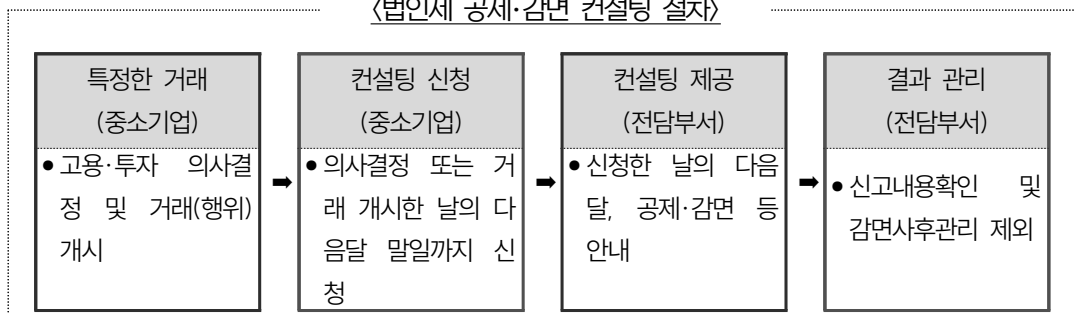
- 맏고, 1~2년간 정기 또는 수시 컨설팅 제공
- 세무컨설팅을 세무간섭으로 인식하는 등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고,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 ◇ 수입금액 100억~1,000억 미만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2.6.13. ~ 6.16. 국세청 실시)
- ▶ 설문에 응답한 기업(532개)의 62%는 세무신고시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함
 -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기업(295개)의 경우 「세액공제·감면의 적정 여부」(46.5%), 「공제·감면세액 계산」(21.0%)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기업(237개)의 경우 「세액공제·감면 대상인지 몰라서」(46.5%), 「어렵고 복잡하다」(22.4%)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함

- (제도개요) 새롭게 개편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로서
-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함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주요 내용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절차〉



- (신청대상)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4만여 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법인

- (신청기한)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근경로: 신청/제출 ▶ 일반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 인터넷 신청

-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제공)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제도 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 산세가 면제됩니다.

3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와 차이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컨설팅 대상법인	• 수입금액 100억~1,000억 법인 중 신청을 받아 협약을 맺은 법인	→	•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모든 중소기업(100억~1,000억)
컨설팅 범위	• 협약기간(1~2년) 중 전 세목	→	• 세액공제·감면 위주 컨설팅
컨설팅 신청기간	• 매년 7~9월	→	• 고용·투자 등 사유 발생시(매월 신청) 또는 경정청구 전
컨설팅 방식	• 기업과 일정 협의(연 1회, 정기) 또는 기업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제공	→	•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 제공

- (컨설팅 대상 확대)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는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된 법인과 협약을 맺고 전 세목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 이번에 개편되는 제도는 컨설팅 신청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유지하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하여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컨설팅 방식 개선) 고용·설비투자 등 세액공제·감면 관련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때에 컨설팅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기존 컨설팅 협약법인)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협약체결법인*(73개 법인)에게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기존 방식으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종전의 혜택을 계속 제공합니다.
* '22년 종료예정 58개 법인, '23년 종료예정 15개 법인 등 총 73개 법인

4 향후 추진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유관 단체에 제도 개편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새롭게 시행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 예상 질문 및 답변

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컨설팅을 통해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② 컨설팅 과정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나요?**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원칙적으로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비대면 서면검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다만,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현장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③ 컨설팅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이나 투자 등 공제·감면이 적용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의 사결정을 한 때에는 횟수의 제한없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22년 8월에 직원을 채용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고, '22년 9월에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④ 공제·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설팅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세액공제·감면을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⑤ 수입금액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는 기업 수, 제도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 지원 및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뒷받침

— 국세청, 2022. 8

◆ 국세청은 7. 22.(금)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8대 중점 추진과제와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①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

[세입예산] 385.1조 원 (전년 대비 50.6조원[△])

[세수현황] '22.5월(누계) 191.5조 원 (전년 대비 33.3조원[△], 진도비 49.7%)

-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

*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 도입 등

②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지원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뒷받침

-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검증 부담완화,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 실시

*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추진 (약 260만명)

-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의 집행기반 구축,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과약 인프라 보강,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 등 추진

- 반도체 등 신산업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민간성장을 저해하는 규제·관행을 적극 발굴·개선

* (신산업) R&D세액공제 우선 심사, 전용상담센터, M&A지원 전담반 설치 등

(중소기업)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일자리 창출 지원, 가업승계 맞춤형 컨설팅 등



③ 과세품질 개선 및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뢰 확보

- 과세 전 검증을 강화하여 과세적법성을 제고하고, 패소사건의 귀책 여부를 분석하여 인사·성과보상에 철저 반영
 - * (상위자) 표창 수여, 전보우대, 상여금 가산, (하위자) 특승·표창 제한, 상여금 삭감
- 복합 경제위기 상황 등에 따라 세무조사 규모 감축기조를 유지하고, 정기조사·간편조사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

	세무조사 규모	정기조사 비중	간편조사 비중
코로나 이전 (‘15~‘19평균)	16,603건	56.7%	14.8%
코로나 시기 (‘20~‘21평균)	14,322건	62.8%	18.8%
‘22년 계획	14,000여건	약 63%	약 20%

- 다만,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고액·상습채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등에 역량 집중
 - 공익법인의 회계부정, 자금유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검증 및 인프라 구축 확대

④ 조직 내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국세행정의 역량 강화

- 현장중심의 실용적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성과·능력 기반의 인사를 통해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일 잘하고 유능한' 국세청 구현
- 불요불급한 회의와 자료준비를 최소화하고,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여 비대면 보고 및 토론식 보고를 활성화 하는 등 업무 효율화 추진

⑤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신설을 통한 혁신성과 창출

-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4개 분과 (① 민생경제 지원, ② 납세불편 해소, ③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④ 조직문화 개선) 구성
- 현장 적합성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과정에 경제·납세자단체, 세무대리인 등 민간전문가 및 일선직원 참여

I

회의 개요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7. 22.(금)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였습니다.

- 주경호 부총리는 치사에서,
 - 세무현장에서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세 공무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경제 원팀으로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 － 일자리·투자 창출 및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과 함께 부동산 세제 등 '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철저한 집행 준비 및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 우리 경제가 현재의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을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 －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여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전 직원 모두가 동참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먼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편리한 비대면 납세서비스 제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 수 있도록 과세품질을 개선하는 등 국세행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탈세와 체납행위는 엄단할 것을 주문하고,
 - － 국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바르고 깨끗한 청렴문화를 확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II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운영방향 1.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소관 세입예산 조달

1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로 국가 재정수요 뒷받침

'22년 소관 세입예산 및 세수현황 ('22.5월 현재)

- '22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2차 추경)은 본예산 대비 +51.9조원 증가한 385.1조원으로, 전년실적 대비 +50.6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조 원)

구 분	'21년		'22년		증 감	
	예산	실적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대비	전년실적대비
총 국 세	314.3	344.1	343.4	396.6*	53.2	52.5
국세청 소관	304.6	334.5	333.2	385.1	51.9	50.6

* '22년 국세(396.6조) = 국세청 소관(385.1조) + 관세(10.1조) + 타기관농특세(1.4조)

- '22.5월(누계)* 191.5조원으로 전년대비+33.3조원 증가, 추경예산 기준 진도비(49.7%, 전년대비 +2.4%p)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 법인세 60.9조(23.0조 ↑), 소득세 60.7조(9.1조 ↑), 부가가치세 37.3조(3.7조 ↑)

2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

① 비대면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디지털 납세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개편

- 홈택스 화면 구성 및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무용어 · 이용법 · 오류메시지 등을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겠습니다.
- 납세자별 신고 · 납부 일정 및 환급금 안내, 지능형 상담, 민원처리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세금비서'(가칭)를 도입하겠습니다.

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가. 납세자 유형과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 서비스 확충

- 복잡한 계산과정 없이 클릭 한번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기존 영세사업자에서 비사업소득자(근로 · 연금 · 기타소득)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 제공 및 원스톱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일괄제공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연말정산 집중기간('22. 1. 15. ~ 1. 23.) 중

· 전년 대비 간소화자료 조회 85만 건(8.5%) ↓, 다운로드 80만 건(9.7%) ↓ 효과

나.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의 규모 확대 및 품질 개선

- 신고인원 증가에 따라 부가세는 250만 명(전년 대비 5% ↑), 종합소득세는 106만 명(전년 대비 10% ↑)에 대해 납세자 특성별 사전안내를 하겠습니다.

③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납세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소통 확대

-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민생지원소통추진단·세무지원 소통의 달 행사를 통해 현장 불편·애로사항의 발굴·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운영방향 2. 민생경제 지원을 통한 위기 극복 뒷받침

3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①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 적극 제공할 예정입니다.
- 영업제한·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22년 말)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겠습니다.
-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겠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세목(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②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등을 조기지급하겠습니다.

-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가구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법정기한보다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 기업의 자금유동성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재해 피해기업 등에 대한 '22.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최대 12일 조기 지급하겠습니다.
 - '22년 정기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심사기간 등을 단축하여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 * 지급예상 규모 : 총 289만 가구, 2조 8,045억 원 예상
-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하겠습니다.(약 260만 명)

③ 민생 안정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장려금 재산기준 완화·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심사시스템 반



영 등 안정적 집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확대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제공하겠습니다.
- 고용악화 등으로 학자금 상환에 곤란을 겪고 있는 청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 역동적 혁신성장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뒷받침

① 신산업 육성·규제 혁신으로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초격차 전략기술, 녹색 신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세무불편 해소를 위한 전용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R&D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세정지원 대상 산업

구 분	대상 산업
초격차 전략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등
녹색 신산업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 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
주력산업 혁신	디지털 혁신기업, 저탄소 전환 지원기업,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 규제혁신 TF를 신설하여 주류행정을 비롯한 국세행정 전반을 살펴 납세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관행을 발굴·개선하겠습니다.
- 재외공관·KOTRA와 협업하여 해외 진출기업·교민에 대한 수요조사 및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②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기존 일부 협약기업에만 제공하던 세무컨설팅을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확대 개편 주요내용

기 존	개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협약체결 법인(수입금액 1백억~1천억) · (범위) 협약법인(1~2년) 중 전 세목 · (방식) 연 1회, 3일 이내 일정 협의·컨설팅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모든 중소법인(수입금액 1백억~1천억) · (범위) 기간제한 없이 공제·감면 위주 · (방식) 매월신청, 다음달 말일까지 답변

-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가업승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빅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판단모형」을 이용하여 세액공제·감면 미활용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 세제 혜택을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② 일자리창출 및 청년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 소재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 등의 고용 증가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제외를 확대하겠습니다.

구분	디지털 전환 핵심업종	지역 고용 증가 기업
대상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술 대체로 고용감소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지방소재 사업장의 고용을 증가하는 중소기업
우대 확대	일자리 창출(고용증가) 준비비율을 일반기업(2~3%) 대비 0.5%p 완화	고용증가 인원 계산 시 지방소재 고용인원 50% 가중치 부여

- 신종업종 창업자의 성실납세를 돕기 위한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성장단계별 세무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년 근로자에 적용 가능한 연말정산 항목을 추출하여 대상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 ①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②월세액 세액공제 ③학자금 교육비공제 등

운영방향 3. 공정과세 실현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

5 국세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① 과세품질 개선을 통한 국세행정의 신뢰도 제고

가. 과세 전 검증 및 과세품질 평가 강화

- 고액 등 중요사건의 경우 최종 처분유지를 담당하는 송무조직에서 과세 전 법리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 직원 별 패소율을 산출하여 과세품질을 평가하고, 상·하위자를 선정하여 인사·성과보상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 (상위자) 표창 수여, 전보우대, 상여금 가산, (하위자) 특승·표창 제한, 상여금 삭감

나. 중요사건에 대한 조세소송·심판 대응역량 제고

- 역외탈세·조세전략(tax plan) 활용, 선례가 없는 사건 등 고난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유



형별 대응 표준모델 구축하겠습니다.

- 동일쟁점 다수사건 과세의 경우 본·지방청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적합한 심판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②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납세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정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현행) 권리보호요청·고충민원만 인정 → (개선)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장부일시보관 연장도 추가
-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과 불복편의 향상을 위해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청구세액 10억 원 이상 사건) 대내·외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③ 국세데이터의 활용·공유 확대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

- 국내 최초로 전 분야 데이터 결합이 가능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 등 활용·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국내 최초 데이터전문기관(금융분야, '20.12월)·결합전문기관(非금융분야, '22.4월) 동시 지정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목적 과세정보 요청에 대해 법 규정 내 신속 제공하겠습니다.
* ('22년 상반기) 업종정보, 매출액, 인건비 등 총 672만 건 자료 제공

6 신중한 세무조사·체계적 세원관리 실시

① 시장 경제 활력을 지원하는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여 14,000여 건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간편조사에 도입하여 중소납세자 스스로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정기조사 비중을 상향하고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하여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②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 엄단

- 가격인상을 통한 폭리 및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의 탈세에 대응하여 민생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사업구조 개편, 고정사업장 회피 등 지능적으로 탈세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다국적기업을 정밀 검증하겠습니다.
- 디지털 기술로 인한 비정형성·불투명성으로 탈세 위험이 큰 가상자산 거래와 온라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종 탈세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③ 전략적 체납관리를 통한 고액·상습 체납행위 엄단

- 납부이력, 재산현황 등 분석으로 체납자별 최적의 체납정리 방안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하는 등 체납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자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④ 공익법인 및 외국인 부동산에 대한 검증 실시

- 공익법인에 대한 면밀한 사후관리를 통해 회계부정 및 자금유용이 확인된 단체는 기재부에 지정취소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외국인 등의 양도세 비과세 부당 적용 및 다주택 중과 회피 혐의를 중점 검증하겠습니다.

⑤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신종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체계화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결제대행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자료수집*을 확대하겠습니다.
* 자료 수집금액 : ('19) 216 조 원 → ('20) 261조 원 → ('21) 342 조 원 → ('22.1분기) 99조 원
-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불성실 신고 혐의자,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로서 종합소득세 무(과소) 신고자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소득 탈루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운영방향 4. 소통문화 확산을 통한 국세행정 역량강화

7 소통강화와 업무혁신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① 현장소통 확대 및 업무효율화를 통한 실용적 조직문화 구축

- 일선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복·수동 업무를 자동화하고, 업무생산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불요불급한 회의와 자료 생성을 최소화하고,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여 비대면 보고 및 보고서 없는 토론식 보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② 바르고 깨끗한 청렴문화 정착 추진

-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겠습니다.
- 직원 구성 변화(여성·MZ세대 ↑), 청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서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자세 등을 집중 교육하겠습니다.

8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으로 조직역량 강화

① 현장 중심의 체계적 업무 지원체계 마련

- 본·지방청의 정원을 핵심기능 위주로 슬림화하고, 감축된 인원은 과학적 업무량 분석을 통해 일선 현장에 재배치하겠습니다.
- 다양한 업무 경험과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 신규직원을 시내 관서로 우선 배치하고, 주요부서 근무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신규직원의 조기 현장적응을 위한 참여·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통해 직무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운영계획

① TF 구성 및 운영 방안

- TF에 ①민생경제 지원, ②납세불편 해소, ③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④조직문화 개선 성과를 설치하겠습니다.
 - － 차장을 단장, 기획조정관을 간사, 정보화관리관을 지원담당*으로, 분과장은 소관 국장, 분과위원은 관련 과장으로 구성하겠습니다.
 - * (간사) TF계획 수립·성과 보고, 전체회의 개최, 분과간 역할 조정, 과제 이행 관리 등, (지원) 업무전산화 자문, 전산시스템 공동 개발·운영, 정보화사업 예산편성·계약 지원 등
- 현장 적합성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경제·납세자단체, 세무 대리인 등 민간 및 일선직원*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 * 연령, 직급, 입직경로, 경력, 지역, 업무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발
- 향후 추진과제별 세부이행방안·실행계획을 마련하여 '23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 세부내용은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